



朴 哲 濬

베팠 &amp; 컴퍼니 코리아 대표

빈부격차 문제가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니 계수 등 단순 지표상으로 보면 한국의 빈부격차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심하지 않다. 하지만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빈부격차는 통계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 성장으로 빈부갈등 피한 美

빈부격차 현상을 보다 복합적으로 이해하려면 단순 지표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국부(國富) 규모, 성장 역량, 복지 정책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지표상의 빈부격차가 크더라도 국가와 개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빈부격차는 훨씬 덜 심각할 수 있다.

또 국부 자체가 이미 커져서 기본 생활 수준이 매우 높다든지, 국가가 교육과 의료 같은 분야에 대폭적인 지원을 한다면 빈부격차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베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빈부격차 문제에 대한 각국의 접근 방법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미국처럼 구조적으로 불평등을 조장한다고 할 만큼 빈부격차가 큰 나라도 있고 스웨덴처럼 국가가 강력한 조세제도와 복지정책을 통해 빈부격차를 최소화하는 나라도 있다. 또 일본처럼 기업이 임금 격차를 최소화하고 평생 고

다 역사·환경·국민적 정서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돼 발전한 것으로, 모든 나라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답은 없다. 가령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전통적으로 강한 국민들의 평등의식에 기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2차 대전을 전후해 일찌감치 달성한 유럽 최고 수준의 국부가 그 바탕이 됐다.

셋째, 국가 시스템상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계층간의 극단적 대립을 피할 장치를 나름대로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결과의 불평등'을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수용할 만큼 경쟁

## 한국, 어떤 나라가 되려는가

용을 통해 빈부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나라도 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공통점이 있다. 우선 경제발전 과정의 어떤 시점에 의식적으로 국가 전체의 시스템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했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대개 이런 결정은 국민소득 1만달러를 전후해 이뤄졌다. 반면 1만달러를 전후해 국가의 비전과 전략적 지향점을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데 실패한 남미 국가들은 국부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각국의 국가 시스템은 저마

과정에서 공정한 게임의 룰을 잘 확립했고, 기업과 개인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해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을 피하고 있다. 반면 스웨덴은 저성장의 합정을 피하기 위해 가구당 노동인력이 많을수록 세금면에서 유리하도록 만들어 여성의 노동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외국 사례가 한국에 주는 교훈은 비교적 명확하다. 한국은 무엇보다 시급히 국가 시스템상의 비전과 지향점을 명확히 재정립해야 한다. 한국은 장기적으로 어떤 나라가 되려

고 하는가? 성장을 포기하더라도 평등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우는 전략을 취할 것인가?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는 점이다.

## 성장이나 평등이나 선택을

선진국의 좋은 점만 취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선진국들이 선택한 좋은 제도들은 상충 관계에 있다. 미국의 사업가 정신, 친기업 정책, 고성장 정책을 닮고 싶은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일본의 평생 고용과 평등한 임금정책을 고집하고 싶은가? 경제 성장과 기업 경쟁력 강화는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것은 국가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결여한 채 각국의 제도를 단편적으로 벤치마킹하는 일이다. 시간과 자원은 유한하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전략적인 목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모두 마찬가지다. 한국은 지금 국가 시스템을 확실히 재정립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빈부 격차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며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시론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